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다시 KBS, 국민의 방송으로!

[성명서] 2019. 7. 2 (화)

우 150-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연구관리동 1층 (연락처) 전화 02-781-2980.팩스 02-781-2989

‘기자협회 정상화모임’ 관련자 처벌은 상식 묻는 일

공영노조, 소수이사 궤변으로 진실 가리지 마라.

그는 보도본부의 최고 실세였고 인사권자였다. 기자들의 부서 배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. 많은 기자들이 희망하는 뉴스 앵커로 누구를 선정할지도 그의 몫이었다. 특파원으로 누구를 보낼지도 결정할 수 있었으며 임기 중에 소환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압박할 수도 있었다. 그래서 그가 주도한 성명서와 연명부가 돌았을 때 기자 사회 전체가 경악했다. 그 의도가 뻔했고 연명에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올 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 몰상식한 상황이었지만 2016년 3월에 일어난 일이다.

일명 ‘기자협회 정상화를 바라는 기자들의 모임’ 명의의 성명서였다. 국·부장 팀장들이 앞 다퉈 실명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. 몇몇 평기자도 이름을 올렸다. 그러나 대다수의 기자들은 황당해했다. 성명서 내용이 황당했고 그 ‘정상화모임’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여기저기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.

말 뿐이 아니었다. 실제 서명을 거부한 직후 돌연 앵커에서 물러 난 기자가 있었다. 일부 특파원들은 서명하지 않으면 ‘소환’ 될 수 있다는 암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. 언론사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KBS보도본부에서 버젓이 일어난 실제다. 게다가 그 상황을 만든 것은 기자사회 최고 실세들이었다.

성명서는 약자들이 저항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다. 저항의 의지를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 실명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한다. 실명이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서 저항의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다.

하지만 그 성명서가 권력자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어떤가? 그때는 성명서라 부르지 않는다. ‘공포문’이라고 부른다. 그리고 그 ‘공포문’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것은 권력자고 실세들이다. 그 실세들에 의해 연명을 요구받는 사람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. 이것이 상식이다. 실제 어땠나? 정상화모임 참여자 명단이 당시 보도본부장 직속 부서인 보도기획부에서 생산되고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. 공포문 작성과 관리의 전

형이다.

다시 말하지만 권력자가 나서서 비판기능을 제어하려던 사건이 '기자협회 정상화 모임' 서명 사건이다. 실제 당시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 물은 결과 참여자 다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며, 비 참여자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불이익에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. 또한 다수의 기자들은 이로 인해 무기력에 빠져 이후 벌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권력형 비리에 있어서 충분한 기자정신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.

뒤 늦게나마 '진실과 미래 위원회'가 당시 일을 조사했다.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가 권고됐고 이번에 그 중 일부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됐다고 한다. 늦게나마 환영한다. 과거의 잘못은 가려져야 하고 책임자는 책임져야한다. 이 또한 상식이다.

그런데 이번 징계에 대해 사내 일부가 '언론자유'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한다고 한다. 응원의 성명서까지 나왔다.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성명서 쓰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. 하지만 내용을 보니 웃지 않을 수 없다. 버젓이 '언론자유'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.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다. 더럽히지 말라. '기자협회 정상화모임'이 도대체 '언론자유'와 어울리기는 하는가?

날씨가 더워지고 있다. 그렇다고 아직 더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. 더위 먹으면 상식을 벗어난 생각이 들고 말이 나오기도 한다. 건강을 위해 자중하기 바란다. 이 또한 상식의 권유다.

2019년 7월 2일

실천하는 교섭대표!

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